

보도시점 2026. 6. 8.(월) 배포 즉시

## 중대재해 사업장 작업중지 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.

### 1. 관련 기사

- 6. 8.(월) 조선비즈 “폭발 사고 났다고 6개월 작업중지는 과도”... 정부, 한화에 19억 지급 확정

- 대전 사업장에서 2019년 2월 폭발 사고로 3명 사망
- 노동청 작업중지명령으로 181일간 조업 못해
- 방위사업청에 유도탄 등 납기 못 지켜
- 대금 98억원 못 받자 소송... 19억 받게 돼

### 2. 설명 내용

- 2019. 2. 14.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 사망, 2명 부상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,
  -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림
- 이후 방위사업청은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약 98.8억원 공제하였고,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납품지연이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것이므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체상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음
- 재판 결과,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의 범위, 기간, 절차 등은 적법하며,
  -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작업중단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에서 비롯된 후속조치이므로 이에 따른 납품지연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판단함

※ 사업장 전체가 화재폭발 발생 및 확대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으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점, 2018년 폭발사고로 9명 사상 후 9개월만에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가 미흡했으며 이에 사업장 전체 작업중지명령은 합리적 조치라고 판단

○ 또한, 사업장에서 6차에 걸쳐 작업중지를 해제요청하여 순차적으로 작업 중지를 일부해제 하였으며, 사업장의 해제신청 관련 서류나 현장개선 미비로 기간이 장기화된 책임을 정부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함

□ 다만, 법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체상금의 면제 요구에 대하여는

○ 당시 작업중지명령 해제 시까지 장기 소요에는 업체의 노력만으로 좌우될 수 없는 사정, 타 업무에도 경제적 손실 발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이 공제한 지체상금의 20%를 감액하도록 판결한 것임

□ 따라서, 기사 내용 중 법원이 “폭발 사고 났다고 6개월 작업중지는 과도” 하다고 판결하였다는 부분은 실제 판결 주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,

○ 오히려 판결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에서 비롯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음
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	책임자	과 장	배영일 (044-202-8901)
	안전보건감독기획과	담당자	사무관	정대성 (044-202-8929)